

지속가능발전과 민주주의

이정림(대전세종연구원 초빙연구원)

<발표1>

- 충남사례의 최우수마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사회적 역량이 우수하다고 분석되는 마을(제도 및 문화중심형 마을자치 유형)의 물적토대(경제적 토대)는 무엇입니까? 예> 마을 공동자산 유무 등

공동체의 자치력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의사결정과정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만으로는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동체의 자치력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물적토대와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표하신 최우수마을 사례에서도 리더십과 제도만이 아닌 마을내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도 중요합니다.

<발표2>

- 에너지전환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 독일 세나우 사례에서, 1997년 지역 전력망 인수 성공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나우 주민의 삶은 에너지자치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논의는 주로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며, 에너지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시나리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산업에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비율은 매우 적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은 전체 에너지산업의 공유화(共有化)를 중심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에너지는 공공성과 안전성이 높게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에너지산업 전반에 시민참여 운영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분권은 동네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 건설된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민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에너지전환은 삶의 방식의 전환(가치, 물질운동체계의 전환: 사익->공익)이며, 생태적이고 평화화적인 자원, 무엇보다 시민권 강화를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운영과 배분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주민 자치’ 실현에 관한 단상

김민정(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1. 목표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사회환경에서 평등한 사회 전환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과도한 화석연료에 기초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 기후변화와 우리 삶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인류가 방사능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심각해진 자연환경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1987년에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이 국제 사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당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대 간’의 원칙이 강조되어 “오늘날의 발전이 현재의 욕구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욕구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면서 주요한 원칙인 세대 간의 욕구를 강조하는 대신 경제 발전, 사회 통합, 자연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하는 접근에 더 초점을 맞췄다.

이런 점에서 제프리 삭스(2015)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에 중점을 두고 세계를 보는 방법이다. 다른 의미는 경제 발전, 사회 통합,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사람다운 삶에 대한 공유된 염원을 그리는 방법이다.¹⁾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분석적이지도 규범적 혹은 윤리적 틀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계에 대한 규범으로써 지구가 추구해야 할 일련의 목표를 제안해준다. 지구의 물리 환경, 지구촌(지구 차원의 사회), 세계 경제 등의 세 가지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자가 제시한) 주민 자치 및 에너지 자치는 인간 사회와 자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충족했는가? 즉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만족했는가?

2. 수단은 무엇인가?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ics)를 주장한 마이클 앨버트(Michael Albert)는 공평성, 자율관리, 다양성, 연대, 효율성 등의 가치를 제시했다.¹⁾

1. 공평성: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어떠한 이유로 획득해야 하는가?
2. 자율관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가?
3. 다양성: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들은 다양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정돼야 하는가?
4. 연대: 사람들은 협력해야 하는가, 아니면 경쟁해야 하는가?
5. 효율성: 소기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가치를 참조하여 (지역) 사회 전환 과정에서 ‘민주성’과 ‘정의’라는 수단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민주성과 정의는 (장수찬 발표자가 제시한) 동네 자치의 실현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이는 경제와 환경, 환경과 사회, 경제와 사회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주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전환과정에서 정의가 실현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개발론과 환경 보호론은 양립 가능한가? 둘째, 사회 전환 과정에서 민주성이 확보되었는가? 즉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었는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어떻게 조정했는가?

3. 주체는 누구인가?

(지역) 사회 전환은 어떤 조직이 주도할 것인가? 조직의 주체로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주민의 자발적 결사체(NGO), 기업 등이 있다. 다양한 정부 형태(관료제 정부, 기업가적 정부, 참여 정부 등), 여러 NGO 형태, 다수의 기업 형태 등의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주요 핵심은 정부와 NGO, 기업이 지닌 본질적 속성에서 주체가 지닌 특징이 사회 전환의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민해보는 것이다. 또한 주체에 대한 문제는 재정의 출처와 사업의 방향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 제프리 삭스, 홍성완 옮김. 2015.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21세기북스

2) 마이클 앨버트, 김익희 옮김. 2003. 『파레곤: 자본주의 이후』 인류의 삶.

<세부 질문>

1. 장수찬 선생님

- 1) 공익과 사익에 관한 기준은 왜 일치하지 않는가?
- 2)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양립 불가능한가? 저자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보는가?
- 3) 현대 사회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시민성(행동적 시민성, 성찰적 시민성, 다원적 시민성, 통합적 시민성)을 시민이 습득할 때, 주요한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4) 시민은 단일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가? 시민의 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 5) 시민성과 다양한 사회 조직(주민자치위원회, 마을 단위 클럽 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 6) 사회관계의 앙상블(ensemble)인 개인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제도 역량이 높아져야 시민 역량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닐까?

2. 한재각 선생님

- 1) 지역 사회의 에너지 소비 형태(주택용/상업용/산업용 등)에 따른 에너지 자치의 본질과 유형은 동일한가?
- 2) 발표자가 제시한 에너지 자치는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 3) 에너지 생산에 관한 권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에너지 시민으로 전환은 가능한가?
- 4) 에너지 생산은 개인이 쓰는 에너지 생산에 관한 권한이 아니라 (국가차원/ 지역차원/ 동네차원) 사회적 에너지 생산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시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에너지 시민권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 5) 발표자가 제시한 '에너지 자치를 위한 전력산업 개편 구상' 안에서 발전 부분, 즉 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 지역에너지공사 + 에너지협동조합 + 민간발전사업자 등의 경쟁적 구도는 제가 제시한 사회적 전환을 위한 목표와 수단을 충족하는가?
- 6) '광명시 에너지시민기획단의 구성'에서 에너지시민기획단의 기준에 소득 수준의 항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충청남도 민선5·6기 민관협치 추진 현황

민선5·6기 동안 「민관협치」를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민주적 참여도정 구현을 추진

김민정(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정보공개	도민과의 정보공유로 도민참여 기반 마련 - 제로(ZERO)-100 프로젝트, 재정정보 충남넷 실시간 공개, 갈등관리 바로알림 등
정책협의	도민참여 정책숙의 및 민·관 정책협력 강화 - 정책수립 타운홀미팅, 각종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 등
공동 비전 수립	민·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의 실행가능한 ‘비전’ 수립 - 금강비전, 경제비전 2030, 서해안비전, 양성평등비전 2030, 안전비전 2050 등
중간지원기관 육성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로 민간역량 강화 및 행정성과 확대 - 사회적경제센터(4개), 공익활동지원센터, 인권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정책협업	민 거버넌스 중심 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 3농혁신, 동네자치, 깨끗한 충남 만들기, 도량살리기 운동 등
정책평가 (환류)	도민에 의한 직접적 도정 평가 및 감사 강화 - 도민평가단·정책서포터즈 역할 강화, 도민감사관 설치 등

충청남도 민관협치 6대 과제 (2016. 6. 수립) 추진 현황

6대 과제		세 부 추 진 사 업	
		사업명	비고
1	「민관협치회의」설치	① 민관협치추진단 구성('16.8월)	매월 정례회의 개최
		②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제정	도의원 발의('17. 10월), 조례 제정('17. 12월)
		③ 충남민관협치회의 설치	조례 제정 이후 추진
2	전문계약직 및 전문직위제 도입	① 전담팀 확대	1개팀 → 2개팀('17.1월)
		② 일반임기제 채용	5급 1명, 6급 2명
		③ 전문직위 지정	'16년 임기제공무원 채용이유로 지정 무산
3	협치 전략과제 선정 및 집중관리	① 외부전문가 자문 완료	4개 전략과제 지원('17. 7월 ~)
		② 전략과제 선정 및 집중관리	1차 년도 성과 평가('17. 12월)
4	협치 촉진을 위한 공무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① 외부전문가 자문 완료	시범 운영계획 수립('17. 12월)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18년 인센티브 예산 확보 노력
5	협치 역량강화 및 가치 확산 프로그램 실행	①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교육(22회), 홍보 및 사례 영상 제작
		② 민관협치 포럼	위원회 활성화 포럼(12월)등 4회 개최
		③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17. 9월), '19년 말 입주 예정
		④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굴(확산)	발표대회 및 사례집발간(12월)예정
		⑤ 중간지원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	중간지원조직협의회(11개 센터)결성('17. 7월)
6	「민관협치」선언	① 「민관협치」선언	향후 일정·방향 논의 필요

김진아(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사무국장 김진아입니다. 우선 동네자치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라는 공간의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충남의 많은 주민자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UN이 발표한 세계도시화 전망 보고서에서도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도시의 발전이나 도시의 성장이 아닌 ‘도시관리’를 이야기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중적인 시스템하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던 도시들이 지속불가능한 위기에 놓이면서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혁신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표준화된 산업기술이나 시스템적인 접근보다는 도시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문학적 요소를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그 지역만의 혁신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의 동네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시스템적인 부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실천노력이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소통과 숙의를 통한 환경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한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충남형 동네자치 사업을 통해 약 100여개의 공동체가 육성되었으며, 지역 공동체들의 자치의식이 강화되고 자주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자치를 기반으로 더 많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많은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이 리더에 의해, 행정에 의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중요한 이슈이며 구성원들이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역량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리더십이 아닌 발전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혼자 또는 소수의 측근에 의해 의사결정 결정을 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시스템을 만들고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발전적인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셋째, 지방정부와 주민이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현장에서는 시민들은 행정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일들이 지역에서 계획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행정역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까지 행정에 요청하거나, 대표성이나 책임성이 부족한 주민들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겠지만, 작은 경험에서부터 신뢰를 형성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일,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험 등을 통해 민과 관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기반으로 보다 더 많은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아래로부터의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환경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연대 합시다!!

이숙경(함양시민연대 사무처장)

시민연대 합시다!!

저는 함양시민연대의 사무처장입니다. 만2년 좀 못되었군요. 함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는 아니고 2003년 1월에 이곳으로 삶의 터를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지어보았고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일과 시민연대의 반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작은 군단위의 동네가 그러한지는 알 수 없지만 시민사회단체라는 낱말조차 지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시민사회라는 개념조차 분명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한사람이나 특정개인이 함께 누리고 나누어야 할 공적자산을 개인의 치부에 쓰는 것을 누군가는, 어떤 단체인가는 목소리를 내어 비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 주실 장수찬선생님의 자료를 읽으면서 자유는 통치를 하는 것과 통치를 받는 것을 번갈아가면 할 수 있을 때 가능 한 것이라는 문장을 읽으면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치를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을 비판하며 또한 정책을 제안하는 일들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그 제안 된 정책이 구현되는 장이되므로 하는 것과 동시에 통치를 받는 것이 되는 셈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단체내부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지역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시민사회에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오래 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또렷합니다. 삶의 끈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의 생활을 맞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옳은 일이라 하여 그 옳은 일을 옳다고 목소리내기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그리고 옳아서 하기보다는 마음이 끌려서 움직인다는 것을 반상근 활동을 하면서 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듣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사람들에게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 최근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낯선 말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피지배계급으로써의 정체성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협치의 경험치가 쌓여있지 않아서 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협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조건이 충족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주도하여 목표선정과 과정을 주입

하는 형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이미 구축해서 내려진 틀 속에 내용을 채워넣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지도 그리 역사가 길지 않아 시민의식의 단계가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좋은 사례를 그대로 본 떠 배양하려는 시도가 넘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기득권이 형성되고 또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빚어낸다 생각합니다.

저는 성숙된 협치를 위해 시민사회가 학습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권'은 곧 '책임'을 뜻합니다. 나의 생존과 직결된 어떤 정책, 제도등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시민사회에 정착된다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테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놓고 시민사회가 소통을 통하여 무엇이 모두에게 더 유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시민력이 길러질 것이고 시민사회는 성숙된 민주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떤 한가지 개별 사업을 위에서 아래로 꽃아서 그것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을 동원하는 것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원보다 더 절실한 것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표현된 것이 변형되지 않고 수렴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치로 향해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끝으로 시민연대합시다라는 인사로 다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부터이든 아래에서 부터이든 혹은 같이든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아래에 있어서 여기서 시작하여 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내가 사는 세상을 스스로의 결정으로 더불어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책임감있게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너무 더디지 않을까 노파심도 들지만 저는 시작을 했으므로 절반은 한 셈이라고 여깁니다.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토론문

복권승(충남지방분권협의회 주민자치 간사)

도시와 농촌사회 공통의 현상, 공공의 이슈와 소통 부족

최근 시골의 마을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매우 빠른 마을의 위기가 도래했다. 주민등록상에 그나마 존재하는 20~40대의 서류상 인구를 보고 시골을 찾으면, 그들 대부분이 군대에 복무하거나 직장생활로 도시에 가 있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이름만 등록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과거 협동노동과 함께했던 많은 공공의 이슈들은 다양하고 세밀한 행정서비스와 기계화를 통해 농촌사회를 협동이 필요 없는 사회로 만들었다. 도시사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18센티~20센티가 채 되지 않는 격벽을 사이에 두는 한 지붕의 생존공동체가 대부분인 아파트사회이면서도 이웃 간에 서로 건전한 교류를 하지 못한다. 이런 생활의 말단 영역까지 국가의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이 더불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참획되지 못하고 탁상에서 이뤄지는 계획

대체로 공동체의 일머리는 문제와 상황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필요를 느끼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스스로 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라는 말이 빠진 경우가 많다. 조사와 계획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몇몇 토호세력이나 공무원의 탁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스스로 주인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관제적인 마을만들기에 끌려가는 소극적인 참여에 그치게 되는 결과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식 표현으로 참획(참여와 기획)이 이뤄지는 마을만들기는 조사 단계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의 발굴과 육성에 인색한 예산

마을과 공동체는 사람의 일이니 처음부터 사람의 문제다. 그런데 현재 국가의 어느 사업이건 대체로 시설이나 교육 그리고 사업 활동 자체에 대한 비용투자는 하지만, 활동가의 인건비나 사람에 대한 측면은 인색하기 그지없다. 마을조사단계에서 과감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의 인적자원의 발굴, 그리고 그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교육활동과 활동비용 지급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갖춘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일이 병

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상황이나 여건이 다양한 현장성에 맞춰 자율성이 보장되는 예산을 필요로 한다.

현장성 있는 지원을 위해 탄생한 중간지원기관의 조직과 현실에서의 한계

이러한 자율성 있는 현장에 맞는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중간지원기관들은 대부분 행정과의 위치선정에서 위탁을 기초로 하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종속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정작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가용인원도 예산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급여와 약간의 사무실 유지예산만을 지원받으며, 근근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은 중간지원기관의 현실이다. 감사를 받는 조직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지원 되는 예산에 대한 성격이나 행정 처리 업무량 또한 과거 관에서 소통하던 방식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는 상황이 이렇다면 중간지원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차라리 마을과 공동체 안에 있는 현장활동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절한 인건비지원이 마을 공동체 활동에 즉시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제도와 틀, 계획과 목표보다 사람과 유기적인 공동체가 우선했던 사례

* 청양 왕진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와 의료서비스 기반의 문화&환경운동 공동체 활성화 사례

(민주적 민간리더십과 현장 거주형 공무원의 장점이 결합된 사례)

* 광주남구는 생활문화예산(문체부)으로 평생학습센터 활발하게 운영.(칸막이 예산에서 해방)

* 흥동과 송악의 경우도 행정구역의 틀이 아닌 교육공동체적 틀에서 공동체와 마을활동.

(행정구역이 아닌 형태로 나타난 자치적 활동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실험적 시도 필요)

마을(공동체)는 유기체이다.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언제고 성장하고 퇴보하고 또 부활하곤 한다. 특성적 요인으로 생활에서의 소통과 분배와 이해가 자연스레 일어나는 복합적 공간이다. 특정한 목적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적 제도적 틀 내에서 이러한 공동체 운동이 꿀 지어진다면 공동체는 경직되고 위축되고 갈등하기 쉽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는 제도의 계획과 틀에서 공동체육성의 수치적 목표를 기획하려하기 보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주민참여 공동체 사례를 귀히 여기고,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유기체적인 특성에 걸맞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에서 올바른 시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제도에 공동체를 맞추기보다 공동체에 제도를 맞춰가야 한다.